



그리스, 좌파 정당 시리자의 총선 승리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안)을

지지하라

그리스

시리자 승리 이후의
쟁점들, 그리스의 좌파들

7, 8~11 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둘러싼 쟁점들

2~4 면

2015년 세계·
한국 경제 전망

15, 16 면

파리 총격 사건과
언론의 자유?

12, 13, 14 면

아이시스는
어떻게 등장했나

15 면

‘국민모임’의
신당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6 면

건강보험
개편안은
노동자 증세다

5 면

누구의 말일까요?

“영국 버밍엄은 온통 이슬람교도들의 천지”

미국 폭스TV 테러리즘 연구소
소장 스티브 에머슨,
버밍엄은 46%가 기독교 신자
22%가 이슬람 신자

“지난 수십년 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역대 정권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
다”

영국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당수
나이절 패라지의 막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났다.”
박근혜의 대국민 거짓말,
혹시 유체이탈?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
어서도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
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
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
다.”

박근혜, 뻔뻔하기도 해라.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

“세월호 진상규명위를 만들려고 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
고 확신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누리당에 주는 세금이 아깝다

“수학여행은 언제까지야?”
“금요일까지야 엄마.”
“그래, 금요일엔 돌아오렴.”
수십 번 금요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한
단원과 학생과 어머니의 마지막 대화

“우리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신
년 기자회견 할 때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해 감동받았
다. 문 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를 매
우 사랑한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시달려 뜨거운
동지애를 느낀다.”
김무성과 문화상의 주머니받거니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공개된
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
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 문건

“불법 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
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1천 명이 안 된
다...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다. 그래
서 영통구는 다른 데보다 훨씬 안전한
동네다.”

새정치연합 수원시장 염태영

“[제주 4.3 학살] 희생자로 지정된 일
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
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

어떻게든 학살 인정 피하고 싶은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박천석·최영준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
(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
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
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
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
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의제 확
대, 전원합의체로 운영, 국회 연금특
위보다 대타협기구 합의가 우선한다’
하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새
누리당 주호영은 대타협기구에서 합
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연금특위에서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그
저 논의만 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적연금 강
화를 대타협기구 참여의 명분으로 내
세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
동’(연금행동)이 정용건 집행위원장
을 야당 추천 위원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김칫국

그러나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들이키는’ 것이
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대타
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
의하는 데에만 합의했다. 논의 기간
이 90일밖에 안 되는데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겠
는가.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
부 장관에 의해 국민연금을 ‘용돈’ 수
준으로 전락시킨 당사자인 새정치연
합이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진지하게
나설 리 없다. 새정치연합은 2014년
초 기초연금 사기극에도 적극 협조했
다.

설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문제를
다루더라도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강화’가 아니라 개악을 요구할 것이
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만 있다면 문제 되
지 않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도 문
제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 줄여 나
가야 한다”며 공적연금 전체를 공격
하려 한다.

따라서 대타협기구 참여가 공적연
금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좌
파 측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웅색
한 변명일 뿐이다.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
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겠다고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
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
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
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
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1월 18일 새정치연합 합동연설회장 앞에서 집회를 연 공무원노조 새정치연합은 개악 저지가 아니라 얼마나 개악할지를 두고 협상을 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
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
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
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
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
연금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메시
지를 담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
를 위해 공무원이 양보하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현 시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공적연금
강화 요구는 공무원연금의 일부 삭감
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2007년에 국민연금 방어 투쟁에 나
서지 않은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하
며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옳다. 당시 공무원노
조 활동가들은 국민연금 개악과 공
무원연금 개악의 연쇄고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안이하게 대응한 면
이 있다.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국
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당연히 강화
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이 아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국
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
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먼저 저지해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한 뒤에 공적연금
의 상향평준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전술적으로 현실적이다.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
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
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
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
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
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
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
리상 타협(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노조 지도부가 협상의 논리에
묶여 투쟁 전선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현숙은 “대타
협기구에서 원활하게 논의가 이루어
지려면 각자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
놓아야 한다”며 노조 측의 양보안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상하위직 가리지 않고

15퍼센트를 일괄 삭감하는 안을 고
려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대타협기구 참
여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각종 ‘양보
론’이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노총, 한국
노총, 교총 등은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한 날, ‘연금개혁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공노총은 양보안을 위
한 조합원 설문조사까지 했다고 한
다.

이처럼 지도부가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면 기층 조합원들에게 혼란
된 메시지를 주는 셈이다.

조합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매
서운 한파 속 길거리 농성도 마다하
지 않고 기꺼이 투쟁기금을 냈던 것
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서였
지, ‘연금개혁’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사정위와 마찬가지로 대타협기
구도 투쟁 조직에 방해물이긴 매한가
지다. 지금은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
니라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연가
파업’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공조해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한 달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답한 공무원 노동자가 무
려 65.8퍼센트였다. 현장 조합원들
은 지도부가 투쟁을 호소한다면 행동
에 나설 태세다. 따라서 이렇게 조합
원들의 분노와 투지가 유지될 때 저
항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
부와 여당의 연금 개악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민
주노총 총파업 조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김하영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 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한상균 후보조 선본은 2015년 총파업을 단연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정책들에서 선 보인 노동자 공격 계획들을 2015년에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좌파들 내에서도 "투쟁"을 부각하는 게 무슨 변별력이 있겠느냐는 주장이 처음에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될수록 그

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한상균 후보조의 2015년 총파업 공약과, "준비"를 명분으로 투쟁을 총·대선까지 미루자는 다른 후보 진영의 공약이 맞붙으며 투쟁 전망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은 한상균 후보조 선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비난하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악을 예고했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의도도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공부문 공격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도 거듭 확인

됐다.

그러면서 2015년에 박근혜와 한판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점차 확산됐다. 77일간의 공장 점거라는 한상균 후보의 신뢰감 가는 전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난 10년간 집행부를 운영해 온 세력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다수 조합원들이 투쟁에 실제로 나설 지도부를 선택한 것이다. 1차 투표에서 그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님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더 자신감이 생겼고 기대도 높아졌다.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총파업의 의제와 시기

이렇게 등장한 한상균 집행부가 박근혜 정부의 올해 최대 국정과제라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그 부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었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에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간 유연화 등 사용자들의 숙원이 망라돼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처우 악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1월 12일)을 통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자본가 계급을 살리고자 집요하게 달려들겠다는 뜻이다. 사실 박근혜는 이런 과제를 부여받으며 자본가 계급의 일치된 지지 속에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가 아니면 이를 추진할 여유가 많지 않다. 특히, 올해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봐도 박근혜가 필사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편도 "생존 전략"에 상응하는 단호

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달라질 거 있겠느냐'며 안이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에서도 추진됐고, 그 결과 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그곳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으로 고통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은 그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행히 민주노총 한상균 신임집행부는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총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공격과 정면 맞짖 뜨는 것으로, 의제와 시기 모두 이것을 정조준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전면 폐기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정리해고 중단과 좋은 일자리 보장,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이 결합돼야 할 것이다.

총파업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과 관련이 크므로 정세 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산하 노조의 예정된 투쟁 일정에 맞추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다.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당부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 개악

안이 상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런 일이 추진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멈출 수 있도록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신임집행부가 준비 촉박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최근에 총파업 일정을 4월 말로 당겨 내놓은 것은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며 총파업 돌입을 주저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민주노총이 그냥 지켜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른 '준비된' 총파업도 잘 되기 어렵다. 뒷북 치는 격이어서 맥이 풀리는 데다, 무기력하게 당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 있고, 한번 통과된 법을 되돌리기는 더 어렵다고 여겨(즉, 승리 전망을 갖지 못해)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개악안이 상정될 조짐이 보이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자들의 대응이 어떻게 우리가 세워 둔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한다면, 그들의 '급습'이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투쟁의 끝은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결이 중요하다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다.

최근에는 총파업이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게 쓰이는 경우가 흔하지만, 말뜻 그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해 공장과 열차와 학교와 관공서와 대형마켓들이 멈춘다면 단 며칠 일지라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맞출 수 있다. 만약 총파업이 그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총파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부와 사용자 공격의 규모를 볼 때 딱 걸맞은 투쟁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면적 공격에 맞서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다.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색내기 수준의 총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시간의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에 머문 그동안의 민주노총 '총파업'과 선을 긋는 확인이었다. 그는 공장을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사악하고 집요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막아 내려면 단시간의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으로는 어렵도 없을 것이다.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오거나 작업장을 점거해야 한다.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서 단연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공격에 직면한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다 함께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와 주류 언론의 인간질에 잘 맞서야 한다. 경제 위기의 심도가 깊어 노동자 계급의 주요 부문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고립시켜 공격할 만한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여러 노동자 부문들(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파상공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파상공세의 약점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인간질해 각개격파하는 전략으로 돌파하려 한다.

박근혜의 이런 전략은 "비정규

직 종합대책(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즉, 비정규직 확산이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결과로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확대해 놓고, 이번에는 정규직 책임론을 내세우며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다. 연금과 일자리 문제를 놓고 세대 간 갈등도 부추긴다.

박근혜의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맞서려면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정치가 중요하다. 가령 좌파 활동가들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왜 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인지, 파견 확대 저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왜 정규직도 나서야 하는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왜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지지해야 하는지 등을 설득해야 한다.

"철밥통"

안타깝게도 좌파 활동가들 중에도 정규직과 공공부문 방어에 부담을 느끼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 여기에는 '철밥통'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될 것이라는 두려움, 공공부문과 대공장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회의감, 심지어 정규직 이기주의의 담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 등이 얹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되고, 공공부문 '방만' 비난은 민간기업의 노동조건 악화 압력으로 작용하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한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잘 조직된 부문의 자신감을 분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그들을 방어하는 동시에, 이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지지해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을 방어할 자신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전투들

앞으로 총파업까지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총파업이 잘 조직 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총파업을 위한 사전 전투들을 회피하지 말고 치러야 한다. 여기서는 민주노총 신임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력'이란 대국회 사업 같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투쟁 의지를 고취시키는 정치를 뜻한다.

가령 총파업 의제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왜 단결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또,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뜨거운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질 조합원들이 사기 저하되거나 투쟁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투쟁 역량이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한 태도 문제다.

민주노총 신임집행부는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가망 없는 타협점을 찾아 대타협기구에 매달리기보다 그 바깥의 대중 투쟁에 중심을 두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투쟁 채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없이 공적연금 강화를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8·18합의를 인정한 급속노조 위원장 담화와 중직 결정을 비판하고,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사내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하겠다고 한 민주노총 신임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울산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8. 18 합의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 대의원대회 결정이 “우리가 투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고 기뻐했었다.(▶ 이번 호 관련 온라인 기사 '중직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를 참조하시오)

셋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에 대한 태도다. 박근혜 정부는 며칠 전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부안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전에 정부안을 추진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노사정위가 들러리일 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정부를 비판만 하고 노사정위에는 남아 있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신임집행부는 한국노총 집행부를 비판하고 '노사정위를 나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총파업 때까지는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쟁점, 투쟁들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당당한 입장을 취하고 사전 전투들을 잘 치름으로써 투쟁력과 단결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좌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한상균 신임집행부는 총파업 성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학생들도 포함하는 총파업 선봉대 같은 것도 구상중인 듯하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민주노총 안팎의 좌파 활동가들이 그 안에서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는 투쟁이 최대한 멀리 나아가도록, 규모가 가능한 한 크고 전투적으로 되도록 애쓰는 것이어야 한다.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총파업이 앞으로의 투쟁에 도약대가 돼 일련의 파업들과 투쟁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상균 신임집행부도 올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총파업을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잘 되려면 좌파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총파업 선봉대 같은 기구 안에서도 전투적인 목소리를 더 잘 내고 투쟁을 최대한 멀리 나아가도록 힘을 더 잘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좌파 단체는 협력해서 민주노총 좌파 지도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 민주노총 중앙과 일부 산별연맹, 그리고 지역본부에 좌파 지도부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대체로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들은 온건한 지도자들에 비해 투쟁을 고무하고 파업중인 조합원들을 적극 방어한다.

좌파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들과 협력해 투쟁을 확대하려 노력해야 한다. 좌파 지도자들이 파업을 소명할 때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들과 협력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비록 좌파이더라도 노사 가운데서 결국 중재해야 한다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하는 타협 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동료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압력도 받는다. 최상의 좌파 노조 지도자조차 동료 노조 지도자들을 공공연히 비판하거나 그들과 의절하기를 두려워한다.

바로 이것이 좌파 노조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좌파 활동가들 자신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파업 회의론을 편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높아 한상균을 뽑은지 아느냐고도 한다. 조합원들은 사기 저하돼 있고 수동적이라는 얘기도.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스로 투쟁에 나설 자신감은 없는 조합원들일지라도 지도부가 소명하는 총파업에는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노동자 의식의 모순을 보지 못하는 일면성의 발로다. 혼자 싸우다 고립될까 움츠렸던 조합원들도 다 함께 파업에 나선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투쟁 근육을 키우다 보면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나아갈 힘도 얻을 수 있다.

박근혜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려 하지만, 그가 막강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은 30퍼센트 대로 떨어졌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며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단결 투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고통받는 민중에게 희망을 보여 준다면 말이다.

맑시즘
2015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MARXISM

맑시즘 관련 주제
2015년 노동자 투쟁 — 민주노총 좌파 지도부의 등장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집행위원장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양동규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등기나다 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www.MARXISM.or.kr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고무적이게도 1월 21일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대의원이 대거 당선됐다.

기존에는 친사측 성향의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대의원 1백75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백여 석을 민주파가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출마한 민주파 후보들은 거의 다 당선됐다고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선거 결과에 고무됐다. “지금 현장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회사는 멘붕에 빠졌어요.”

사측은 기본급 대폭 인상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되레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중간 관리자들 1천5백 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민주파 집행부가 미흡한 합의에 만족하지 말고 더 싸우길 바랐다. 집행부가 제시한 잠정합의안이 66.5퍼센트(1만여 명)의 높은 반대로 부결된 것은 이를 보여 줬다. 그동안 친사측 대의원을 때문에 강력히 싸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던 점을 볼 때,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는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확실히 보여 준 것이다.

민주파 대의원들은 이런 조합원들의 바람을 반영해,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에 당선한 한 민주파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들이 자기 분과에서 소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다시 투쟁 머리를 묶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측을 압박하고 노조 지도부가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방법일 겁니다.”



김지태

민주파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투지를 모아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장호중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용을 예정이다. 부과 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진보진영과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일부 혼란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개편안은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을 임금 수준이 덜 낮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만큼 재산이 많은 것은 기업주 등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에 대한 부과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개편안의 취지를 정당화한다. 예컨대 주거용 주택과 자동차밖에 없는 저소득층 노인이 어지간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보험료는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주·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보험료)이 너무 관대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첫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너무 작다.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고작 14퍼센트만 지원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로 재정 규모를 줄이고는, 쓸 돈이 없다고 엄살을 피운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에 필요한 의료비를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다.

2016년에 재정 지원 기한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이참에 지원을 줄일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번 담뱃세 인상에는 일반재정 지원을 담뱃세로 대체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듯하다.(지금은 담뱃세를 거둬 건강보험에 추가로 6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자본가들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낸다. 이명박이 대표적인데, 재산을 수백억 원이나 보유한 자가 건강보험료는 3만 원도 안 내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이런 편법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인데도 정부는 방치해 왔다.

셋째, 재산이든 소득이든 애당초 모든 부과 체계가 불공평한 것도 문제다. 보험료 상한선



사진 이미지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월 소득 7천8백10만 원 기준)이 있어서 이견 회 같은 재벌 총수나 연봉이 수십억 원씩 되는 CEO들, 지역 유지들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커다란 특혜를 주고 있다.

개편안의 초안이 된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사용자 및 경영자 단체의 거센 반발” 때문에 상한선을 없애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는 계속 인상됐으면서 말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에 견줘 적게 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사실상 이를 방조해 왔다. 양도, 상속, 증여 등에는 아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꾼다면 서도 이런 것들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부자 감세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기업주들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도록 했다지만 기업주들은 애초에 이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한다.

정부는 의료 이용 증가율보다 보험료 인상을 높게 책정해 흑자를 만들고는, 재정 지원을 줄일 공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은 진보적이기는커녕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부자 들의 ‘소득’은 대부분 재산으로 전환되는 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고착해야 생계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 부과 완화는 자본가·부자들에게 훨씬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줄어든 보험료는 담뱃세, 주세 등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 삭감이나 다를 바 없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는 파렴치한 부자들을 단속하지는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릴 것이다.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도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개편안을 반대하고, 오히려 재정 지원 확대와 부자 증세,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의무 완화, 보험료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가 노동자들을 보살피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말인가? 진보진영 내의 흔한 오해와 달리 복지는 노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너무 궁핍한 처지로 내몰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려고 하지만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착취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일정한 국가 개입은 경쟁으로 빚어지는 시장의 위기를 피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시 말해, 복지 제도는 기업주들을 위한 측면도 작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원들은 서로 이윤 경쟁을 벌이며 몸집을 불려 왔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수익성이 높은 상급병실과 값비싼 의료기기를 대폭 늘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종의 ‘공급과잉’ 상태가 됐다.

물론 실제 필요에 견줘 병실과 서비스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많은 상품들처럼 그만한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 즉 유효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병원은 이런 몸집 불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대형 병원들의 일부도 상당수의 병실을 비워 뒀아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문제가 더 크다. 지난 몇 년 새 이 ‘과잉 공급’ 문제는 병원 자본가들 사이에 커다란 위기감을 낳았다.

유효 수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일부 확대하면 경쟁에서 밀려난 병원들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경쟁에서 낙오하는 병원들에게 숨돌릴 틈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병원장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보험 적용 때문에 생기는 “손실분을 1백 퍼센트 보전해 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980년대 말 이후 민간 대형 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준 덕분이었다.

다른 한편, 이런 조처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병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애써 밀어낸 경쟁자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조처를 의료 민영화처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정책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조처는 결국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자본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정부 재정이 악화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으로서의 그 비용을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야 한다.

1970년대 말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추진한 복지 개혁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오히려 복지의 총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배자들은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해 왔다. 동시에,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경쟁을 강화시키려 했다.

복지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장장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재정 지원 축소 문제를 꺼내든 까닭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정부 지원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임금의 6퍼센트를 기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즉, 월급이 3백만 원인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로 9만 원을 낸다.(나머지 9만 원은 기업주가 낸다.)

다른 하나는 기업주들과 중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소유 재산의 크기와 소득에 따라 부담한다. 이들을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이처럼 부과체계가 나뉜 까닭은 애당초 건강보험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0년에 들어서야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됐지만 그 제도는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예컨대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직장의료보험에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도 하다.

정부는 통합 전에 지역가입자들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왔는데, 통합 이후 이를 차츰 줄여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이를 다시 전체 재정의 14퍼센트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기한도 2011년까지만 하기로 했다. (비록 5년 연장돼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져 온 것이다.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김인식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채 후보도 국민모임과 함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만 큼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냉소가 강한 반면, 진보 정당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안이 못 되고 있는 현실과 관계있는 듯하다.

국민모임은 강한 어조로 새정치연합을 비판한다.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야당이라기보다는 제2야당”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프레시안〉 2015년 1월 21일자). 국민모임이 주최하는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제목도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이다.

그런데 “분산되고 분열된 진보 정당”은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국민모임의 105인 선언문’ 중), 국민모임은 “새로운 진보적 대중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진보 정당의 성격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신당의 성격, 특히 기반과 강령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요 국민모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영국 노동당 같은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모델로 삼는 듯하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에선 과거 보수당-자유당 양당 체제였다가 노동당이 생겨났고, 그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해 보수당-노동당 양당 체제 속에서 집권도 했다. 우리 또한 진보적 신당이 올라와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영국 모델[노동당]로 갔으면 한다.”(〈프레시안〉 2015년 1월 21일자)

2000년대에 줄곧 민주노동당을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세균 교수가 “영국 모델”을 말하는 것에 놀랄 사람들도 있겠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다. 이미 2010년 김 교수는 PD 좌파가 국민승리21에서 분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좌파가 계속 남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레디앙〉 2010년 7월 3일자) 이것은 정치연대 → 노동자의힘 →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 →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로까지 이어지는 PD 좌파 부활의 기원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김 교수와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영국에 노조를 기반한 노동당이 출현하면서 자



국민모임이 제안하는 신당이 전투적 선진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유당의 힘이 약해져 제1야당이 노동당으로 바뀌었다.”(〈폴리뉴스〉, 2015년 1월 20일자)

물론 국민모임이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단순 재연하려는 것은 아니다.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핵심 기반으로 삼는 데 반해, 국민모임은 노동조합 지도자들뿐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들과 심지어 일부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까지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과거 민주노동당에는 없었던 기반이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은 새로운 진보 정당의 기반을 이렇게 특정했다. “새정치연합을 이탈한 진보세력들, 국민모임 등의 재야와 사회운동의 진보 인사들,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사민주의 지향의 정의당, 보다 좌파적인 노동당이 하나의 큰 울타리를 짓고 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레디앙〉 2015년 1월 15일자)

이를 통해 새정치연합 바깥에서 신흥국형 또는 한국형 개혁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 정당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반들을 보면 대략 그 정당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N 분의 1로 참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의 정치적 상징성이 만만치 않아 그의 바람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지지 정당 방침(“정치 방침”)을 채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시도가 노동조합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국민모임은 노동·정치·연대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정의당은 서구식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선호한다. 천호선 대표는 정의당이 “과거 운동권 이념을 완전히 털어버린 정당”이라고 강조한다. 노회찬 전 의원이 “탈운동권 진보”를 주장한다. “정치와 정당은 선거에 나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비아북, 182~185쪽)

반면, 노동당은 진보 재편을 놓고 그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당으로 진보 재편 과정에 참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듯 국민모임이 구상하는 신당은 전망이 아직 유동적이고, 잠재적인 정치적 스펙트럼도 넓다. 실제로 ‘국민모

임의 105인 선언문’은 “뜻있는 모든 정치인”에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적, 계파와 소속을 넘어 연대하고 단결”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이 정당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가령, 2000년대 민주노동당 같은)에는 못 미치는 중도 주류 개혁주의 정당이 될 공산이 크다.

공식 정치를 군부 독재 정권의 잔당들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즉,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정당이 지배해 온 한국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정치 프로젝트에도 얼마간 진보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새정치연합이 대중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 왼쪽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성장할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올바른 전술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이런 종류의 정당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먼저 일국적 수준에서 봐도, 국민승리21이 발족한 1997년 이래 거의 18년 동안 경험했다. 민주노동당은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으로 출발했지만, 당 역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좌파성이 약해지고 점점 더 개혁주의적인 본질을 드러냈다.

그다음 세계적 수준에서도, 적어도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잇달아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로 지난 18년 사이에 배신을 거듭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럽의 광장 점거 운동에서 나타났듯이, 급진화한 서구 청년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커다란 반감을 나타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충성도도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바뀐 국제적·국내적 정세를 보면, 국민모임이 주도한 신당의 진보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세 큰 실망을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의 전투적

인 선진 노동자들에게 국민모임이 제안하는 신당이 최선의 정치적 대안이 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이들은 더 나은(더 투쟁적이고 더 좌파적인) 대안을 바랄 자격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계급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전방위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 —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비정규직 확대 등등 — 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정의당까지 참여하는 신당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진지하게 반대할지 의문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금으로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좌파 지도부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 좌경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다.

즉, 우리는 계급투쟁의 침체 국면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이 큰 규모로 분출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도 먼저 계급투쟁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자 연대를 가로막는 각종 분열 이데올로기와 다계급적 민주주의 정치를 반대하고 반자본주의적·반제국주의적 대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국민모임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에 초좌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선거에서 더 좌파적인 대중 정당이 부재한 가운데 신당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등 부르주아 정당과 맞붙는다면 신당에 (비판적)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쟁점을 놓고 신당의 좌파 계열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의당 지도부가 “탈운동권 진보”를 주장하며 정당과 운동을 예리하게 분리시키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세력도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 노동자들이 투표를 넘어 신당에 참여하는 수준으로까지 지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선진 노동자들은 대중 투쟁을 바탕으로 신당보다는 더 좌파적이고 투쟁적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맑시즘
2015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MARXISM

맑시즘 관련 주제
새로운 진보 정당
 연사: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www.MARXISM.or.kr

시리자 집권 후 그리스 앞에 놓인 전망

김종환

1월 25일 실시되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집권이 유력하다. 그동안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이는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시리자는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시리자의 승리는 긴축에 맞서 투쟁한 그리스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리스의 긴축 반대 투쟁은 지난 5년(2009~14년) 동안 네 번이나 정부를 무너뜨렸다. 지난 연말에 무너진 정부는 옛 집권당들로 이룰 수 있었던 마지막 정권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시리자가 집권하는 것은 반긴축 투쟁이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다.

최근 파노스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리자 집권 후 그리스 앞에 놓인 전망과 현 상황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리자가 받을 상반된 압력

시리자 정부가 오른쪽에서 받게 될 압력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자본가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유출을 막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면 말이다.

그래서 시리자 지도부는 그동안 유럽 지배계급에게 자신이 그들과 ‘말이 통하는’ 상대임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영국 금융가의 큰손들을 만났다. 시리자 지도자 치프라스는 경제 강령을 온건하게 다듬고 기층 당원들이 반기지 않는 보수적 인사들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시리자는 선거 기간에 왼쪽에서 오는 압력, 즉 긴축에 반대하고 일자리를 되찾길 원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에도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치프라스는 유럽 자본가들과 그리스 노동자들 사이에서 줄타기 해 왔다.

지금 시리자가 지지율 1위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반긴축 투쟁과 반파시스트 투쟁 덕분이다.

이 노동자·청년 중 적잖은 이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길 않아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청년층이 시리자에 거는 ‘기대’가 시리자 집권 후 좌파적 ‘압력’ 구실을 할 것이다. 파노스는 “전술적으로 시리자에 투표하지만 시리자보다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약 10만 명가량 된다”고 추산했다. 그리스 인구가 약 1천1백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큰 규모이다.

이처럼 시리자는 집권과 함께 막대한, 상반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방송국 점거 파업을 벌이며 긴축 반대 최선두에 섰던 그리스 공영방송 ERT 노동자들.

뜨거운 쟁점1 - 부채 상환

시리자는 그리스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채를 놓고 유럽연합과 재협상하기를 원한다. 부채 상환 기간을 50년 또는 60년으로 연장하면 부채 부담이 낮아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은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에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에 한발 양보하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그리스 노동자 계급이 유럽연합에게서 실질적 양보를 얻어내려면 만만찮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

물론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도 있다. 그리스가 금기를 깨고 아예 유로존을 탈퇴하면 자신들의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계속 긴축을 촉진하도록 시리자 정부를 길들이길 원한다.

이 점에서 유럽연합은 시리자 정부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래 그리스는 유럽연합에게서 새로 융자받는 조건으로 2월 말까지 긴축 정책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럽연합이 이 기한을 미루고 시리자에게 석 달 정도의 시간 여유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리자는 그동안 꿈꿔도 앓던 유럽연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냈다고 내세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대가가 따

른다. 부채 상환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해 유럽연합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리스에서 자본과 노동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SEK와 그 당이 속한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는 부채 탕감과 유로 화(貨)와의 단절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더는 은행가들의 협박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채 탕감 요구는 ‘더는 은행에 돈을 줄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유럽 자본과의 정면 충돌을 가져와 그리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갈 전환적 강령* 성격의 요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뜨거운 쟁점2 - 고용 증대

그동안의 긴축 정책 때문에 실업에 처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물론 일자리를 잃은 1백만 명이 당장 복직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국 ERT 노동자들처럼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부분이 복직될 수 있는 지에 그리스 노동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RT에서는 2천5백 명이 해고당했는데 이들은 긴축에 맞선

투쟁의 최선두에 섰었다.(해고 직후 ERT 노조는 방송국을 점거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송출한 바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일자리를 놓고 시리자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ERT 노조는 ‘방송국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결의에 찬 말을 하고 있다.

ERT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압도적

으로 시리자 후보를 지지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고한 이전 정권을 선거에서 심판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시리자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돌려 주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시리자가 노조 지도자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층의 노동자들이 투쟁하려는 것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뜨거운 쟁점3 - 파시즘과 인종차별의 위협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도 시리자 집권 후 다시 중요하게 부각될 전선이다.

최근까지도 그리스에는 자신이 나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황금새벽당당이 빠르게 성장했었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SEK 등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덕분에 지금 황금새벽당 지도부는 전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곧 퇴임할 현 정권은 한사코 황금새벽당 재판을 미뤄 왔다. 반파시즘 운동은 시리자에게 집권 후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서 황금새벽당 지도부를 감옥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그리스는 ‘불법’ 이주민들을 18개월 동안 구금하는 수용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은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우익은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 “좌파들은 그런 지하드 세력의

그리스 입국을 오히려 환영하자고 한다”면서 왜곡한다. 시리자는 이 수용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에서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다.

시리자가 집권하면 시리자 정부는 이 쟁점을 피해야 할 원할 테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압력 때문이라도 이 쟁점은 다시 부상할 것이다. 반파시스트 운동가들은 이에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을 위한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다.

혁명적 좌파의 개입과 노동자들의 호응

이번 선거에서 SEK는 안타르시아를 통해 시리자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안과 후보를 내세웠다.

시리자는 집권하더라도 국가 기구와 경제를 진정으로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 개혁을 얻으려면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다. 시리자 정부에 일자리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려면 시리자한테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초 시리자를 혁명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 그 안에서 활동하기로 한 다른 좌파들은 지금 아주 조용하다. 그들은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전망이 커지자 시리자 표를 갇아먹을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에 SEK 등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집회를 열고, 작업장을 방문하며 ‘시리자가 집권하면 낡은 정당들의 지배는 끝나겠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시리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SEK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시리자에 투표하려 하고, 또 SEK가 시리자 대신에 안타르시아를 지지한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노동자 연대〉의 신문을 사고 SEK의 유인물을 읽고, 시리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민영화를 막으려면 함께 싸워야 한다는 SEK와 안타르시아의 주장을 지지한다.

SEK는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앞으로 SEK의 입지는 아주 탄탄해질 듯하다. 〈노동자 연대〉가 지금까지 많이 팔린 적이 없다고 한다. SEK와 안타르시아는 시리자보다 더 좌파적인 세력으로서 시리자 지지자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전환적 강령
투쟁의 당면 요구에서 비롯하지만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들.

맑시즘
2015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MARXISM

맑시즘 관련 주제
유럽의 정치 양극화 — 그리스 시리자에서 파리 공격까지

연사: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저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www.MARXISM.or.kr

2012년 6월 17일에 처리된 2차 총선 결과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명적 자본주의의 좌파 연합 인터파시아는 득표를 0.33퍼센트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선거구별의 저조한 성적은 이미 선거 전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져나 있었던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인터파시아가 2차 총선에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냐, 시리자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시리아에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범한 협조고 다른 하나는 협소한 것입니다. 협조한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2차 총선에서는 표가 시리자도 몰리고 다른 좌파들의 득표는 줄어든 테니, 그럴 바에 지리러 참합시다 말고 1차 총선에서 얻은 7만 5천 표(1.2퍼센트)를 지키자. 광범한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 운동에 필요한 것은 좌파들의 단결이다. 그러니 인터파시아는 출마하지 말고 시리자에 투표하지 말고 대중에게 호소해야 한다. 리크 알리 같은 저명한 좌파 인물들도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소한 것입니다. 협소한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2차 총선에서는 표가 시리자로 몰리고 다른 좌파들의 득표는 줄어들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출마하지 말고 1차 총선에서 얻은 7만 5천 표(1.2퍼센트)를 지키자. 광범한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 운동에 필요한 것은 좌파들의 단결이다. 그러니 안타르시아는 출마하지 말고 시리자에 투표하십시오 대중에게 호소해야 한다. 리크 알리 같은 저명한 좌파 인물들도

이렇게 주장했고, 심지어 안타르시아에 속한 '좌파 재구성'이라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도 "안타르시아의 출몰이 곧 대하고 시리아에 투표하자"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논쟁의 연장선이었습나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르시아가 참된 자제가 사라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교에 필요한 것은 피파의 단일인데, 안타르시아가 종파적이며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지만 그 밖의 다른 파파는 시리아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범죄와 정당 모델을 모두 따라야 하는가

— 나라마다 조건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르시아에 속해 있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가 국제사회주의경향 IS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독일의 IST 조직인 마르크스21—"이 동지들의 몇 명친은 링크스룩(좌선)에 있습니다!"—은 좌파당(당명에) 들어가지 않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는 리스펙트를 결성했었는데, 좌파당과 리스펙트는 안타르시아 같은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파티보다는 세리자 같은 범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SEK는 별나게 무슨 까닭이?

SEK는 이런 주장에 반대해 논쟁했고,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완전히 옳았다고 봅니다. 반박 주장의 요지는 나카마다 상황이 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로 이뤄집니다. 나카마

다 정부, 법, 운동, 좌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독일은 운동 상황이 다르고, 좌파의 상태는 훨씬 더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좌파당을 완전히 파괴한 1933년 뒤로는 사회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좌파당이 형성했습니다. 좌파파티 단지 몇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것만은 아닙니다. 독일 운동의 발전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좌파당은 끔찍했던 슈타이거 집권파를 처치하고 독일 시민들이 분열하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시민당에서 이탈해 나온 주축은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오스카 라폰테이었습니다. 라폰테는 재우정관을 지낸 시민당의 지도적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시민당에서 좌파들과 선

다 정부, 법, 언론, 좌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 상태와 독일은 운동 상황이 다르고, 좌파의 상태는 훨씬 더 나쁩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좌파들을 완전히 파괴한 1933년 뒤로는 사회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좌파당이 창당했습니다. 좌파당이 단지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것만은 아닙니다. 독일 운동의 발전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좌파당은 꼭쾅했던 슈뢰더 집권기를 거치고 독일 시민당이 분열하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시민당에서 이탈해 나온 주축은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오스카 라온테인이었습니다. 라온테인은 재우당관을 지낸 시민당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는 시민당에서 떨어져나와 선

게단(WASG)이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여기에 옛 동독 공산당 출신자들이 결합해 파피당이 창당됩니다.

리처지의 역사는 이와 매우 다릅니다. 2008년 그리스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한 고등학교를 샅샅이 훑어보고, 아이들의 가방을 열어 보았습니다. 당시 원내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시리지를 이 반란을 지지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보다 공산당이 더 파파치적이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산당은 이 반란이 프락치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말이 아니라 행동은 보면 시리지는 다름 아닌 파파치 개혁주의 정당입니다.

시리자는 어떤 단체인가?

시리자의 증추는 '좌파 연합'이라는 뜻의 시나스피오스모스입니다. 1968년 그리스 공산당이 폴스 스탈린주의 경향과 유로코뮤니즘 경향으로 분열하는 데, 이때 유로코뮤니즘 파가 시나스피오스모스로 이어집니다.

시리자가 좌파에 자리 잡고 있어도 개혁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례가 민주좌파당입니다. 민주좌파당은 현 연립정부에 속해 있는데, 반면 정예만 해도 시나스피오스모스 소속인 인물들이 많은 정당입니다. 즉, 현재 정부 안에도 정당이 있는 정당과 시리자는 반면 전이만 해도 한 정당이었던 것입니다. 시나스피오스모스와 민주좌파당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유로코뮤니즘연합을 지지합니다. 민주좌파당이 시나스피오스모스에서 [오른쪽으로] 땔

어저날까 때 민주좌파당과 성향이 비슷한 많은 당과 인사들이 함께 나가지 않고 시나스피오스모스에 남았을 겁니다. 이 경우 인사들이 현재 시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1차 총선과 2차 총선 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시리자만이 그리스에 안정과 성장과 사회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자 안에는 시나스피오스모스 외에 몇몇 소규모 단체가 있습니다. 마오주의 단체, 트로츠키주의 단체, 2000년 SEK에서 분열해 나간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시리자 안에서 별 گوش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들은 시나스피오스모스에 견줄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시리자 지도부와 다른 주장을 하면 시리자 지도부가 나서

여러날까 때 민주좌파당과 성향이 비슷한 많은 당내 우파 인사들이 함께 나가지 않고 시나시피소모스에 남았을 겁니다. 이 우파 인사들이 현재 시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1차 총선과 2차 총선 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시리자만이 그리스에 안정과 성장과 사회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자 안에는 시나시피소모스 외에 몇몇 소규모 단체가 있습니다. 마오주의 단체, 트로츠키주의 단체, 2000년 SK에서 분열해 나간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시리자 안에서 별 گوش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들은 시나시피소모스에 견주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시리자 지도부와 다른 주장을 하면 시리자 지도부가 나서

서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몇몇 단체들이 자신들의 기관지에서 SEK와 안타르시아가 주장하는 그 지역의 유로존 탈퇴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 폴트를 지지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라지 지도부는 그들의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의 약습입니다.

개혁주의의 정당한 보수적 성향이 반 자본주의의 좌파가 그 당 바깥에서 별도의 선거 대용 기구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히 있습니다. SEK도 시라지의 이데올로기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안타르시아를 결성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SEK가 좌파적이라는 일각의 비난이 옳은 것일 테죠.

그리스의 좌파들 —
시리자, 공산당,
SEK, 안타르시아

이 글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SEK) 활동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2012년 7월 방한해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모임에서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2년이 지난 것이지만 시리아, 공산당, 안타르시아 등 그리스 좌파들의 주장·실천·역사, 그리고 좌파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어 현재 그리스의 상황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좌파 조직의 필요성

사회당 학생 당원들은 반대했지요. 이런 상황은 혁명적 반자본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학 저거 운동

안타르시아를 결성한 둘째 이유는 그리스의 극좌파가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1974년 독재 정권이 타도된 뒤로 그리스에서는 극좌파가 항상 강력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극좌파들은 마오주의, 스탈린주의, 알튀세르

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했고 대체로
종파적이었습니다. 극좌파들은 대학을
주된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학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던 극좌파들에
게 2006년 정거 운동은 큰 충격이아는
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대학 점거의 물
결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당 청년 당원
들이 사회당 지도부로부터 이반한 덕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극좌파들은 '종파주의'라는
말을 듣기 꽤 좋았는데, 그들은 사회당
을 그저 우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사회당과 노동자·학생의 관계도 일반적 지배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즉, 사회당은 노동자·학생들을 조종한다시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14세가 '집이 곧 국가'이니라고 했듯이 그리스¹⁾의 종파적 극좌파들은 '집이 곧 운동이니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간자 집이 곧 운동이지 않은 상황, 즉 자기들이 아닌 수많은 학생들이 강력히 한 운동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요, 게다가 대학 바깥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이 일었습니다.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 안타르시아

적어도 세 개는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EK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더해 세 번째 다리로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1918년 독일 혁명 당시 서로 룩셈부르크가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913년 12월 룩셈부르크는 신생 공산당이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보다시피 룩셈부르크는 이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주장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혁명 상황 속에 있고, 노동자 평의회가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 평의회에 대항하는 기구이다. 적들은 선거를 통해 노동자 평의회를 분쇄하려 한다.' 루트비르크가 왜 옳았는지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그리스에서 SEK가 안타르시아에 반한 좌파들의 좌파 연합체를 결성하기로 한 것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이처럼 안타르시아의 시작은 SEK 대

의원협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르시아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
다. SEK의 결정은 2007년에 있었던 네
안타르시아가 창립된 지 10년이 넘었
다. 그 사이 여러 안건이 포함될 다른
단체들과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
타르시아가 창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은 2008년 말에 일어난 거대한 반란이었
습니다. 안타르시아를 만들자고 다른 작
파들을 설득하는 데는 또 한 차례의 거대
한 투쟁 물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체제에 순응하라는 지배계급의 압박과 시리자의 우경화

자를 우회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리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지혜에 왔습니다. 오히려 공산당보다 더 많이 지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 행진의 최종 목적지는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산당당은 국회의사당 쪽이 아니라 반대쪽의 노동부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시리자는 운동과 반란의 일부였습니다. 2차 총선에서 지배계급이 벌인 공포 부추기기 캠페인의 목적은 거리의 민중과 시리자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시리자로 하여금 거리의 민중에게서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성공했습니다. 시리자를 우회화하기 위해 만들고, 시리자가 '책임 있는' 단계에 되겠다고 말하게 만든 것이죠.

시리자와 똑같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안타르시아는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타르시아가 시리자가 따라간 흐름을 따라갔다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안타르시아가 이런 흐름을 따라갔다면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됐을 것입니다.

안타르시아가 독자 출마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급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가 시리자가 당선하면 좌파정부를 구성해 국회 재건당과 맺은 양해각서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즉, 긴급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노동자들은 시리자에 투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균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의회가 양호한 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해 스스로 나서서 국회를 포위하고 싸우기도 합

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당선하면 양해각서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투표하기에도 합시다.

노동자들의 의식이 모순돼 있다고 해서 시리지가 우경화한 것과 똑같이 노동자들도 우경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림자의 ‘모순된 의식’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노동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작업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1차 총선에서는 안타르시아에 투표했다가 2차 총선에서는 시리자에 투표하려는 노동자, 두 번 모두 시리자에 투표하려는 노동자 등을 만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르시아의 주장도 지지하고 시리자가 민주스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일단 양해각서를 폐기해야 한다. 시리자의 권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시리자에 투표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당신들에게 투표하겠다.’

그리스 반자본주의의 좌파의 과제

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오른쪽에 있는 시리자 같은 좌파가 커지면 자신들 같은 극좌파는 입지가 더 약해질 것이란 인식입니다.

그러나 SEK는 그런 생각을 틀렸고, 오히려 극좌파의 침증이 훨씬 더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리자가 우경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로부터 왼쪽으로 이탈해 혁명적인 사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좌파에게는 두

마지막으로, 안타르시아 내부의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EK는
제4인태서널 선거 지부를 제1
하면 다들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SEK는 선거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선거 결
과는 대중 정서의 굉장한 급진화를 보
여 왔고, 이는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라고 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적정화를 기
로 보기보다는 위협으로 보는 경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파시즘에 맞선 싸움입니다. 둘째, 노동운동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혹독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에 맞서 노동자들도 분명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반자본주의 파파는 우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 안에서 투쟁을 전진시킬 혁명적 핵심 활동가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신문

노동자 연대를 정기구독 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gudok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 가능)

wspaper.org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파리 총격 이후 독일에서 12만 명이 참가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 출처: guenstern (블리카)

파리 총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1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가해진 총격과 이를 뒤 뱅센느 시의 유대인 상점에서 네 명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물론 비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비난은 보통 전통적으로 서구가 중시해 온 자유를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침해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류의 비난은 그런 비극이 벌어진 역사적 맥락을 놓치고 있고, 제국주의 전쟁과 프랑스 국내의 무슬림 천대를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있다.

2 9·11 이후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목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무슬림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지하드 테러리스트의 잔혹행위를 낳고, 그런 잔혹행위를 구실 삼아 다시 전쟁이 정당화되고, 그 결과 잔혹행위가 더 많아진다. 파리에서 벌어진 살인극은 이 악순환의 최근 사례였다. 이번 살인극에 반응이 전보다 컸던 것은 중동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가 등장한 가운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아이시스의 성장은 2003년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이라크 사회를 산산조각내고,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가 반혁명 전쟁을 벌인 결과이다.

3 파리 살인극과, 이보다 앞서 벌어진 [2004년] 마드리드 폭탄 테러와 [2005년] 런던 폭탄 테러는 이라크 전쟁과 그 뒤의 상황 전개가 빚어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들이다. 이 말은 그 살인극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시작 전부터 수많은 비평가들과 주류 논평가들이 경고했던 인과관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가 '테러와의 전쟁'이 유럽에서 무슬림(그로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했고 문화적 소수집단으로 고립된 처지였던)을 더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무슬림 혐오는 유럽에서 인종차별의 주된 형태가 됐다. 특히 프랑스는 그 정도가 심했는데, 학교에서 머리 스카프를 쓰거나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교과과정에서 프랑스 제국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수의 유럽 무슬림 청년들이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같은 무장 지하드에 이끌린 것은 놀랄 일이 못 된다.

4 따라서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공격을 주로 언론의 자유 침해로 보는 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샤를리 에브도〉는 1968년 이후에 등장한 좌파의 하나로 출발했지만 최근 몇 년간 무슬림을 모욕하고 도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두고 18세기에 계몽주의가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던 것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오늘날까지도 바티칸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리고 막후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유럽에서 이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소수자들의 종교다. 〈샤를리 에브도〉가 그런 이슬람 선지자에 대한 만평은 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유럽의 수많은 무슬림을 모욕하고 분노케 했다. 프랑스와 올랑드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인터넷에 쓴 내용을 갖고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구속할 만큼 언론의 자유에 적대적이다. 하지만 올랑드와 유럽 지배계급의 다른 지도자들은 '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이용해 1월 11일 파리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보통 사람

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5 우리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르크스·엔겔스가 페니언[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일종과 논쟁하던 시절과 레닌·트로츠키가 나로드니키와 논쟁하던 시절부터 테러리즘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것을 거부해 왔다. 우리가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대상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이고 노동자 계급의 대중 행동만이 이를 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드 집단은 이런 전략과 정반대인 전형적인 테러리즘 전략을 추구한다. 테러리즘은 엘리트 전사와 대중을 분리시키고 대중을 수동적인 상태로 남겨 둔다. 의심할 나위 없이 파리 살인극을 저지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살인극에 대한 억압적 대응과 무슬림 혐오를 촉발해 더 많은 무슬림을 테러 단체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테러리즘 전략과, 지배계급의 이간질을 통한 각계각파 전략은 서로 공모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6 이와 달리 우리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천대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단결을 위해 싸운다. 이미 총격 사건 전부터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가 성장하고 있었다. 경제 위기와 유럽 정부들의 긴축 정책이 낳은 효과가 신자유주의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하고 오만한 행태와 맞물리면서, 인종차별적인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이 치고 나올 공간이 열렸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N), 독일의 페기다(PEGIDA), 영국의 영국독립당(UKIP) 등이 그들이다. 주류 정당들은 이 극우 정당들이 벌인 이주민, 무슬림 등의 소수자 공격에 영합해 왔고, 그

덕분에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더욱 정당화됐다. 파리 살인극으로 인한 분노와 공포 분위기는 가뜩이나 만연한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세 올랑드와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사건을 이용해, 이미 비대한 보안 기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쥐어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 현 상황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에 맞서 최대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각 나라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이 거리 시위를 하는 곳에서는 대규모 맞불 거리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인종차별 선동가들의 집회에 도전하기 위한 대중 시위도 필요하다. 그러나 나라를 막론하고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반대자들은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을 대중 동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시위에 특히 무슬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1월 11일 프랑스에서 열린 "공화주의 행진"처럼 정부가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도 테러 참극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무슬림 희생양 삼기에도 반대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도 시위에 최대한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8 이와 함께, 우리는 제국주의가 저개발국들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도 계속해야 한다. 서방의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부분 패배하고 조용히 빠져나갔

지만, 이라크·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은 강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병은 계속 늘고 있다. 프랑스 제국주의도 자신의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상대로 군사 개입을 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2013년] 프랑스의 말리 개입은 최근 사례였다. 우리는 이런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테러와 싸우는 명분으로 억압과 사찰을 강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기구들을 더 확대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9 파리 살인극과 뒤이은 사태 전개는 급진좌파와 혁명적 좌파에게 중대한 도전이다. 많은 좌파들이 자본주의 국가와 이슬람주의를 대등하고 똑같이 위험한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 국가는 국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떠받치고, 막대한 권력으로 억압과 파괴를 자행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이슬람주의를 대등하게 여기는 것은 이슬람주의에 맞서 자본주의 국가를 편드는 것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예컨대, 많은 이집트 좌파가 그런 입장을 취해 무슬림혁명제단에 맞서 엘시시의 반혁명 정부를 지지했다.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급진좌파가 〈샤를리 에브도〉에 지지를 제공한 것은 소수자인 무슬림을 사실상 내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천대받는 자들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노동자 계급이 세계에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제거하고자 싸우도록 성·종교·인종·국적을 떠나 단결하는 것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5년 1월 21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코디네이션

번역 김종환

〈샤를리 에브도〉사건 이후

프랑스·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대응과 과제

전문 통역사 천경록 씨가 〈샤를리 에브도〉사건과 그 여파를 놓고 최근 유럽의 몇몇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혁명적 좌파의 대응이 사태 전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한다.

프랑스

좌파의 취약한 대응

〈샤를리 에브도〉사건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공세에 이용됐는데, 급진 좌파의 극히 취약한 대응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극소수 좌파만이 ‘내가 샤를리다’ 구호에 반대했고 꽤 많은 급진 좌파들이 1월 11일 “공화주의 행진”을 지지했다. 반자본주의신당 NPA는 이 행진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무슬림 혐오에는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진 불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프랑스 좌파들의 이런 대응은 프랑스 무슬림들의 고립감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비록 극소수이겠지만 그중 일부를 지하드 세력의 품으로 떠미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사태 전개 때문에, 유럽에서 인종차별적 우익과 파시즘 세력의 부상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다가올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날 프랑스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한편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프랑스 단체는 최근에 NPA 속에 거의 용해되다시피 한 탓에 지난 몇 달 동안 반파시즘 전선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파리 행진이 열린 당일 전국 회원 총회를 소집했는데 소수만이 참석했다. 이후 그들은 독자적 조직을 부활시키는 데 열의를 보이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인종차별 반대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3월 21일 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 차별에 반대하는 팻말을 든 시민 파리 총격 이후 독일에서는 12만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독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하다

독일에서는 아주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샤를리 에브도〉사태 전부터 무슬림 혐오 세력의 위협적인 준동이 있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 혐오와 유럽연합 반대를 내건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2퍼센트를 득표했고, 홀리건들이 쾰른에서 나치 4천 명과 행진

을 벌이기도 했다. 페기다[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경우 지난해 12월 드레스덴에서 수백 명 정도가 모인 시위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매주 월요일 3만 명이 모이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에 대항하는 시위로 등장해 뮌헨에서 2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샤를리 에브도〉테러가 벌어졌다. 독일 좌파 내에서 우익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독일 전

역에서 12만 명이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벌였다. 2003년 반전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거리 운동이다.

덕분에, 막상 우익은 샤를리 사태로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좌파의 대응이 정세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메르켈이 ‘무슬림은 독일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세 번이나 (처음으로) 강조해야 했던 것도 이런 압력의 결과였다. 시위는 ‘내가 샤를리다’라는 팻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좌파적이었고 인종차별에 반대했다. 사람들은 페기다 등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려고 시위에 나왔다.

좌파의 정치적 개입이 중요하다

독일의 운동은 고무적이지만 그 안에는 사상적 혼란도 있다. 페기다 반대 행진 참가자들은 대체로 천대받는 무슬림들에 대한 연대감을 갖고 있지만, 무슬림 혐오가 오늘날 유럽에서 인종차별의 주요 형태임을 명확히 인식하진 못한다.

무엇보다, 지금 독일에서 메르켈이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데 정작 디링케(좌파당) 상층 지도부가 소극적인 것은 불길한 조짐일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상

황이 좋지 않은 것은 주류 우익 정당들이 그런 논의를 주도하도록 좌파들이 방치했기 때문이다. 좌파가 지금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시기에 독일의 혁명적 좌파는 과감하고 선명하게 주장하면 분명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독일 단체의 잡지 〈마르크스21〉은 ‘내가 샤를리다’ 행진 이틀 뒤에 ‘왜 우리는 샤를리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띄웠는데 전례없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연설 요청이 쇄하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언론의 자유인가?

정선영

파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테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파리에서 1백만여 명이 참가한 테러 항의 집회의 핵심 구호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에 언론의 자유라는 대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언론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타인의 믿음을 모욕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인종차별과 종교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권력자들에 의한 탄압과 불이익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후자는 차별과 억압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짓누르며, 결국 차별을 온존시키는 지배자들에게 이로운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을 조롱한 것에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 지배자들을 비롯한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인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전쟁을 벌였다. 가난한 무슬림 이민자들을 테러리스트나 복지 기생충으로 묘사하며 차별하고 천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들을 모욕하는 만평을 서방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받는 고통에 더한층의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물론 테러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무슬림들에게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모욕을 참고 받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점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입장은 테러를 낳은 근본 원인이 제국주의적 중동 침략과 무슬림 억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제국주의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서방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혼란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에서 비롯한다.

자유주의 윤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추상적 진리와 권리를 강조한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자유, 평등, 우애’였듯이 말이다. 이는 자본주의 초기에는 절대군주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을 단결시키는 구실을 했지만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공고해진 이후에는 온갖 모순을 낳았다.

자유주의 윤리

자본가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윤을 추구할 자유로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권리는 억압했다. 1인 1표를 던질 형식적인 평등은 (어쩔 수 없이) 허용했지만, 부와 권력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나눌 권리는 (절대로) 배제했고,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리는 가식이 됐다.

사회가 적대적인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추상적 가치들은 어느 계급이 추구하느냐에 따라 서로 첨예하게 충돌한다. 계급사회를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은 가치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집단에게나 통용되는 추상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윤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자본가 계급이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노동자 계급이 삶과 조건을 지키기 위한 자유가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친일과 독재 옹호에 앞장섰던 〈조선일보〉 등은 2000년대 중반 광범한 언론 개혁 요구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저항하기도 했다.

진리와 권리 등은 언제나 구체적 맥락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자유’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유인가? 이를 묻어야 한다. 그리고 적대 계급(들)만의 자유와 권리일 때는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판단 기준은 무엇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을 통해, 억압받는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열 없이 의견과 주장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것이 노동자 계급과 억압

받는 사람들의 저항에 이롭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나 진보당 해산처럼 국가가 언론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을 탄압할 때 이 권리를 적극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혐오 발언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발언들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을 이간질하고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해롭다. 이런 주장들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만약 파시스트들의 경우처럼,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는 주장이 소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 행위로 직결된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대중 자신의 실력 행사로 막을 수도 있어야 한다. 서구의 반파시즘 활동가들은 파시스트들의 거리 행진을 막는 시위 등을 조직하며 맞서 왔다.

가치 판단을 할 때는 언제나 그 구체적 맥락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운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방향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속주의란 무엇인가?

이 글은 원래 2005년, 당시 영국 SWP 당원 이언 버철이 쓴 것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논쟁 상대자 이름(앤드류 코트) 대신에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프랑스 공화주의자라고 번안했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몽주의 이해하기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격으로부터 계몽주의 전통을 옹호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반드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볼테르와 그의 동료들이 살아 있던 시절, 교회는 여러 면에서 주적(主敵)이었다. 전제군주는 신권으로 지배했다. 1766년 가톨릭 미사 행렬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처형된 기사 드 라 바르의 경우처럼 신성모독죄는 사형으로 처벌받았다. 볼테르는 용감하게도 그런 저항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이후] 계몽주의는 대개 부르주아적이었다. 지도적 계몽주의자들은 대중을 뿌리 깊게 불신했다.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볼테르의 평소 견해를 잘 보여 주는 일화

가 있다. 한 번은 손님 한 명이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볼테르는 하인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 하인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죽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계몽주의를 계승했지만, 계몽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는 혁명가의 주요 과제가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관념론을 거부했다. “대중의 아편”이라는 구절로 유명한 글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은 종교는 사회 상황의 산물이므로, 오직 종교를 만든 사회 상황이 사라져야만 종교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종교가 바로 사라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의 히잡 착용 금지지는 인종차별적 조치 2011년 영국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열린 히잡 금지법 반대 시위.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잘못된 세속주의 정의

프랑스의 세속주의 전통은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하다. 1882년 프랑스에서 세속주의에 기반해 보편적 초등교육이 처음 도입됐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경제가 근대화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동력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프랑스는 크고, 대부분이 농촌인 나라였다. 대다수 농민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시민이라는 생각이 모호했다. 반면 모든 마을에는 사제가 있었다. 프랑스 공화국 [제3공화국]의 지배자들은 많은 농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바티칸의 정치를 따를까 봐 걱정했다. 학교는 아이들에

게 조국이라는 개념을 심어 주도록 설립됐던 것이기도 했다.(인도차이나 반도의 식민지화 정책을 고안했던 쥘 페리 같은 정치인들이 보편 교육에도 긴밀히 관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략은 성공했다.(많은 용감한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4년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 맞서 프랑스 농민들을 “그들의” 공화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제1차세계대전]에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정계를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사회적 폐해에 맞서 싸울 태세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꺼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경멸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세속주의를 변명거리

로 삼았다. 프랑스 급진당의 역사 전체가 이를 증명한다.

“종교적 교리로부터 공공영역의 해방”이라는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세속주의 정의는 너무 모호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세속주의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나도 동의한다. 영국성공회는 국교(國敎)의 지위를 박탈당해야 하고, 신성모독죄는 폐지되어야 하고, 학교의 종교 수업은 역사와 사회 연구의 일부로서 다양한 종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비록 대다수 시민들이 이 문제들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국가 기관에서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종교를 금지하고 싶어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그들의 정치적 실천에 신앙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끼친다. 무신론자들은 이를 개탄하지만, 무신론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우리는 개탄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학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이런 영향력 자체를 우리가 막지는 못한다.

“종교에 몰입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핵무기를 가진 펜타곤의 기독교 광신도들이 무슬림 광신도들보다 훨씬 더 걱정스럽다. 하지만 똑같이 종교에 몰입해도 그들과

다른 경우도 많다. 마틴 루서 킹과 말콤X도 종교적인 믿음에서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공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브루스 켄트[전 가톨릭 사제이자 사회운동가]와 많은 이견이 있지만, 반전 활동가라면 그의 지칠 줄 모르고 용감한 활동에 존경을 표해야 한다. 내가 속한 노동조합 회의에 누가 와서 파업 대신 기도를 하자고 한다면, 나는 정중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신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망할 CEO 놈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나 더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박수를 치고 신학적 토론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다.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살펴봐야 한다. 1905년 레닌은 열정적으로 가폰 신부와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다. 많은 불세비키가 경찰 쫓나불일지도 모를(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다) 성직자에게 너무 호의적이라고 레닌을 비판했음에도 말이다. 크롭스카야는 «레닌을 회상하며»(박종철출판사, 2011)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았다. “가폰은 러시아를 휩쓴 혁명의 주역이었다.” 1903년 불세비키는 특별히 종교를 가진 이들을 겨냥해서 <라스베트>(새벽)이라는 신문을 창간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종교 신앙을 가졌다. 러시아 혁명 이후, 트로츠키는 무슬림들에게 세심하고 종파

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슬림 민족주의를 러시아 민족주의와 같은 반열에 놓으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무슬림 민족주의를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굽힘 없이 투쟁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행정·통치 분야에서 드러나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야 한다. [만면] 무슬림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고, 조심스럽게, 공동여 토론해야 한다.”

그렇다면 히잡[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의 경우는 어떻게?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히잡이 억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나는 의문이 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인 나의 어머니

는 머리에 스카프를 자주 착용했다. 욕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는지 그냥 점잖게 보이기 위해서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게 입는 관습이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사실’이다.

게다가 국가가 히잡을 금지하면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히잡이 금지되면 될수록 히잡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원리주의에 끌리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단체가 히잡 착용하는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여성들과 동료들을 사회주의에 등을 돌리게 하는 짓이다.

1백년 남짓 전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드레퓔스를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신디컬리스트인 에밀 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드레퓔스가 “돈 많은 장교 중 하나인 알자스 출신 유대인 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급 정치”가 조야하고 기계적으로 적용된 결과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주의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다. 그 결과는 시온주의 운동의 성장이었고,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히잡이 억압적인 것이 설사 맞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히잡 착용 금지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계몽주의의 엘리트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전통에서는 언제나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은 억압받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

여전히 생생한 반전 시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두 명의 젊은 아시아 여성이 생각한다. 그들은 나란히 행진하며, 확성기를 돌려 쓰며 반제국주의 구호

를 외쳤다. 한 명은 히잡을 썼고, 다른 한 명은 쓰지 않았다. 어쩌면 사석에선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내 의견을 물어 봤다면, 나는 아마도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지 아닌지, 억압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스스로 해방될 것인가는 오로지 그들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번역 최병현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시오. 최일봉, ‘박창신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을 옹호하며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레프트21> 117호

한국 청년의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자원 정황

박근혜는 미국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김종환

십대 한국인 청소년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2명이 아이시스에 납치돼 살해될지 모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아이시스의 잔혹 행위를 두고 이슬람이 원래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암시한다. 그리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동에 이식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이슬람 교리는 물론, 이슬람과 중동의 실제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런 분석은 종교가 사람을 사실상 세뇌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순전한 관념론이고, 아이시스가 등장한 중동의 사회적 조건을 은폐한다.

아이시스의 등장은 1991년 걸프전

쟁 이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미국이 이라크 사회를 황폐화시킨 것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다. 아이시스의 핵심 지도부가 이라크 출신이라는 점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에 이라크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2003년 침공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그 이후에는 종파 간 갈등을 부추겼다. 생필품마저 부족하고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많은 이라크인들은 생존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복지와 보호막에 의존했다.

그 결과, 1980년대까지 아랍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일컬어지던 이라크에서 이슬람주의의 영향이 빠르게 커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시스의 모태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2004년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라크 대중은 알카에다의 극단적 종파주의와 거리를 두며 종파 구분을 뛰어넘어 거듭거

듭 대중적 항의 운동을 일으켰다. 아랍 혁명에 고무받아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벌어진 ‘이라크의 봄’ 시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종파주의적 시아파 정부는 이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쓰라린 패배감 속에서 점차 아이시스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2004년 미군에게 수천 명이 학살됐고 미군이 물러난 뒤에는 이라크 정부의 잔인한 시위 진압을 겪은 도시 팔루자가 이라크에서 가장 먼저 아이시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이웃나라 시리아에서 또 다른 독재자 아사드가 혁명을 잔인한 종파주의 전쟁으로 비튼 것도 아이시스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

이처럼 아이시스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자행한 패악과 시리아의 반혁명이 낳은 흉측한 산물이다.



사진 MC3 Brian Stephens

미국 주도 공습으로 넉 달 동안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1천4백 명이 넘는다(시리아인권관측소)

아이시스 성장의 동역학

많은 외국인들이 아이시스에 자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중동에서 주류를 이루던 개혁주의 세력이 몰락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랫동안 중동의 주류 이슬람주의 정치 경향은 무슬림형제단이었다. 이들은 알카에다 등과 거리를 두며 선거를 통한 변화를 약속했다. 2011년 아랍 혁명 이후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 정권들은 아래로부터 민중이 가하는 압력과 위로부터 지배계급이 가하는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다 결국 다시 옛 지배계급에게 권력을 내준다. 집권 1년 만에 쿠데타로 쫓겨난 이집트의 무르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아이시스가 성장한 것은 주류 개혁주의 세력의 몰락과 대조를 이룬다. 아랍 혁명이 후퇴하는 현실을 보며 사기저하된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서구의 악폐일 뿐이고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는 아이시스의 설명에 솔깃해 한다. 게다가 아이시스의 이데올로기는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시아파, 그리스도교, ‘불경한 여성’ 등)을 제시하며 패배감에 젖은 이들에게 값싼 위로도 제공한다.

한편, 유럽의 무슬림들은 일상적으로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에 시달리고 서방 국가들의 중동 개입을 보며 오랫동안 불만을 쌓아 왔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접받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는 아이시스의 주장에 유럽의 일부 무슬림들이 환상을 품는 배경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강력하면서도 실력 있는 조직을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이시스를 대안으로 잘못 택한다. 아이시스가 이라크·시리아를 넘어 더 광범한 청중을 얻게 된 맥락이다.

따라서 아이시스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랍 민중의 대중 행동으로 아랍 혁명을 다시금 전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해부터 미국이 아이시스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은 해악적이다.

미국의 전쟁은 아이시스의 명분(“미국과 이라크·시리아 정부로부터 수니파를 보호한다”)을 강화하고, 종파 간 갈등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보통 사람들을 아이시스로 떠미는 구실을 한다. 최근 아이시스 점령 지역을 취재한 〈인디펜던트〉지의 기자는 “공습으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때마다 (미국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IS(아이시스의 다른 이름)에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미국의 전쟁은 또한 기층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아이시스에 반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아이시스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모두 “제국주의의 첩자”라고 뒤집어씌운다. 그래서 아이시스를 대신할 진정한 대안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작부터 미국의 중동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 돈은 현재의 친제국주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다. 군사적 지원도 사실상 열어 놓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해외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군 해외파견법’도 밀어붙이며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잠재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중동에서 아이시스를 대신할 저항 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김종환, ‘이슬람국가는 누구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137호

김준호, ‘ISIS 등장으로 이슬람주의를 오해해선 안 된다’, 〈노동자 연대〉13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디플레이션이 경제 활동 감소 통화 대란을 부르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세계 금융체제가 지난주[1월 셋째주]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서, 세계적 (금융)붕괴 6년 뒤에도 안전한 피난처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주 목요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 화(貨)가 유로에 견줘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으려 시행했던 유로-프랑 최저환율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미국·독일·영국과 함께 (자산)도파쳐 가운데 하나다.

경제가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은 안전을 위해 이들 나라에 돈을 보관하려고 한다.

이는 스위스 자본주의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이다. 만약 환율을 그냥 (시장에) 맡겨 버리면 ‘핫머니’가 유입돼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스위스 수출품은 유럽의 경쟁 기업보다 비싸게 된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1년 9월 1유로당 최저 1.20프랑으로 환율을 고정했다. 프랑 화의 가치가 이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은 외화 자산(외국 통화로 된 자산들)을 (프랑 화를 주고) 구입해야 했고 그렇게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프랑 화를 쏟아부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중앙은행은 5천억 유로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스위스 총생산(GDP)의 80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스위스가 최저환율제를 포기토록 한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양적완화 계획이 마침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1월 22일 유럽중앙은행은 1천4백조 원 규모로 양적완화를하기로 결정했다. — 편집자 주]

이 양적완화 계획은 채권을 구입해 새롭게 돈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 돈을 기업들과 가계에 대출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세계적 (금융)붕괴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은 모두 큰 규모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양적완화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경제 규모에 견주면 (미국과 영국보다) 더 큰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리고 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

다. 12월 유로존 물가는 0.2퍼센트 하락했고 영국도 물가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새로 돈을 투입해 물가하락을 막겠다는 바람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 그는 독일 지배층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야 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부채가 많은 회원국을 지원하려는 약간의 기미만 보여도 독일의 고수출 경제 모델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양적완화

지난주에야 녹색 불이 켜졌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양적완화 정책은 합법적이라며 독일 헌법재판소의 제소를 기각했다.

어쩌면 드라기는 독일의 저항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견주어 좀 더 약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 유입될 돈은 외환시장에서 유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 전방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저환율제를 포기했을 수 있다. 포기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프랑이 유로 대비 무려 39퍼센트나 올랐다.

이런 충격들은 몇몇 외환거래소들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이 일은 세계적 (금융)붕괴를 겪고도 얼마나 많은 부정한 행동들이 계속됐는지 그 민낯을 보여 줬다.

런던에 기반을 둔 외환거래소들은 투기꾼들이 선불로 낸 현금보다 1천배나 더 많이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어수룩한 채무자들은 금융 붕괴 때 그랬듯이 스위스 프랑 화로 결제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았다. 프랑 화 가치 상승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되돌아보는 것이 지난주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전부가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의 증상이자 또한 경제 침체가 계속되도록 거든다.

지난주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췄다.

“세계경제는 오직 한 개의 엔진 — 미국 — 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세계은행 관계자가 불평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를 움직이던 진짜 엔진인 뉴욕과 런던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37호 / 번역 최용찬

